

수 신 39개 제시민사회단체
발 신 참여연대 (담당: 이선미 팀장 02-723-0808 pp@pspd.org)
환경정의 (담당: 김명철 활동가 02-743-4747 viviodante27@eco.or.kr)
제 목 기후부담 가중하는 화석연료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안' 폐기하라
날 짜 2026. 04. 13. (총 3 쪽)

성 명

기후부담 가중하는 화석연료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안' 폐기하라

- 국회 과방위, 오는 14일 AI 데이터센터의 진흥만 이유로 기후부채 높이는 LNG PPA 허용,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등 특별법안 통과 예정
- 기후부담 가중하는 화석연료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당장 중단하고 재생에너지·지산지소 원칙 담아야

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4/14(화) 전체회의를 열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관련 6개 법안을 통합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위원회 대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하지만 AI 산업 육성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안은 AI 데이터센터의 막대한 전력·물 소비와 이에 따른 기후·전력계통 영향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기존의 분산에너지 원칙 및 탄소중립 정책과 충돌할 수 있는 특례를 포함하고 있어, 사회적·환경적 부담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 이에 기후·노동·시민·환경 등 제단체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는 특별법안의 폐기를 촉구하고, 기후·에너지·지역 균형을 고려한 원점 재논의를 강력하게 요청한다.
2. 특별법안은 화석연료 기반의 전력조달을 허용하여 기후정책에 역행한다. LNG 가스 발전에 대한 직접 PPA 허용은 기존 전력망의 안정적 운영과 계통 규모를 넘어서는 에너지 수요 발생을 관리하고, 화석연료를 장기적으로 퇴출하고자 하는 탄소중립 정책 및 기후정의 원칙에 전면 배치된다. 이는 데이터센터의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화석연료 기반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해 기후부채를 키우고 에너지 전환 흐름에 역행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 조항이다. 더욱이 LNG 시장에서 민간 발전사가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낮은 가격에 연료를 직수입하는 유리한 조건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판매시장

개방은 현재의 특혜 구조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며 전력시장의 민영화를 확대해 에너지 공공성을 약화시킬 수 있어 우려된다.

3. 특별법안은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등 핵심 규제를 무력화하고 계통부담을 지우는 법안이다. 비수도권 데이터센터에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는 것은 AI 데이터센터의 급격한 에너지 수요 증가, 수도권 집중, 장거리 송전망 확충 문제가 이미 크게 대두된 상황에서 불합리한 특혜이자 계통부담의 가중요인이 된다. 또한, 이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통해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 소비할 수 있는 전력 기반을 만들고 대규모 에너지 소비 시설이 미치는 전력 부담을 사전에 관리하고자 하는 국가 에너지 정책의 원칙을 훼손한다. 이러한 특례조치는 전력계통의 운영의 안정성과 정책 신뢰를 저해할 것이다.
4. 특별법안은 ‘인허가 타임아웃제’, 의제 처리 등 무분별한 특례를 두어 다층적 환경 영향 검토와 절차적 정당성, 공공성을 포기하는 법안이다. 각종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와 인허가 타임아웃제 등의 과도한 특례는 명확한 원칙과 기준 없이 데이터센터의 확산을 초래할 것이며, 이러한 특례 중심의 접근은 전력·환경 부담에 대한 통제 없이 시설 확충만을 촉진할 것이다. 데이터센터는 에너지 지산지소 원칙하에 건설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원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육성을 위한 지원 역시 이러한 원칙에 기반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5. 특별법안은 사회적 수용성 및 갈등 비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최근 AI 데이터센터 건설이 주민 반발로 무산되는 등 사회적·환경적 쟁점이 심화되고 있으며, 수도권 집중과 에너지 조달 문제로 인한 갈등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법안은 투명한 정보공개와 사회적 협의, 지역 수용성, 이해관계자 간 조정에 대한 충분한 고려는 커녕 관련 내용을 배제하고 있다.
6. 국회는 지금 당장 기후부담 가중하는 화석연료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안’을 폐기하고, AI 데이터센터를 에너지 전환과 지산지소 원칙하에 구축하도록 원점에서 재논의하라. 끝.

2026. 4. 13.

(사)일과건강, (사)환경정의, 60+기후행동,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공공운수노조, 공공재생에너지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국제기후종교시민네트워크,

그린피스, 기후넥서스, 기후정의동맹, 녹색연합, 녹색전환연구소, 대전녹색당,
대전충남녹색연합,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부여환경연대, 사단법인
기후자원정센터 아크,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 사단법인 로컬에너지랩, 생태지평,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 서울환경연합, 서천 미세먼지 고압송전선로피해대책위,
성북기후행동, 시민건강연구소, 아이건강국민연대, 에너지정의행동, 여성환경연대,
인권교육온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보인권연구소, 제주평화인권센터, 참여연대,
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플랜1.5,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
환경운동연합 (39개 단체)

▣ 성명 [[바로가기/다운로드](#)]